

정인이 재판에 심리분석관, 살인죄 근거 증언

대검 심리분석관 증인으로 나설 예정

檢, '살인죄' 적용 때 심리분석 검토해

사건 날, 양모 진술 신빙성 등 밝힐듯

서울 양천구에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의 입양부모 다섯번째 공판이 3일 열린다.

이번 공판엔 살인 혐의를 받는 정인이 입양모 심리분석 등을 진행한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인다. 검찰이 정인이 입양모의 주된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할 수 있었던 근거 중 하나가 심리 분석 결과였기 때문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3일 정인이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5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증인 3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건 검찰 수사에 참

여한 대검 심리분석관이다.

검찰은 지난 1월13일 첫 공판에서 당초 아동학대치사 혐의로만 기소됐던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사실)로 추가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면서 검찰은 "기소 후 추가로 확보된 사망원인에 대한 전문가(법의학전문가 등 4곳) 의견 조화 결과 및 장씨에 대한 통합심리분석결과보고서(대검 법과학분석과)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근거를 전했다.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한 대검 심리분석관은 총 4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난달 17일 2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장씨의 심리생리검사결과 통보서나 행동분석결과 통보서 등 심리분석결과보고서를 증거로 동의했다. 변호인이 해당 증거의 입증 취지는 여전히 부인하지만, 증거 능력 차



체는 인정하면서 증인신문 필요성은 사라진 셈이다.

검찰은 이에 3명의 대검 심리분석관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다만 3일 공판에 참석하는 대검 심리분석관은 여전히 증인신문의 필요성이 있는 증인이다. 이 분석관은 직접 거짓말탐지기를 실시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정황상 장씨를 조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분석관의 조사 및 분석 당시 상황에 대한 증언을 통해 살인 고의성 주장을 강화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오전 아동학대로 쇠약해진 정인이를 남

어뜨리고 발로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본다.

이를 통해 장씨가 정인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실제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적 가격도 했다는 취지다.

반면 변호인은 "발로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아동학대치사에 있어서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그로 인해 사망을 한 것만은 모르겠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3일 예정된 대검 심리분석관 증인신문도 분석 결과 관련 내용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기동취재본부

이웃집 사는 10대 여아 때린 지적장애인 입건

지적 장애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10대 여아를 때리고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웃집에 사는 10대 여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6시께 광주 북구 모 아파트 단지 내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초등학생 B양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끌어 내리려고 한 혐의다. B양은 A씨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지적 장애 판정을 받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명료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엘리베이터 안팎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 A씨가 자신이 거주하는 층에 멈춘 엘리베이터에서 B양을 끌어 내리려고 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 가족은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한 일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가족이 정신 감정 진단서를 제출하는 대로,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해당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적 장애 판정을 받았으나,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충분한 법리 검토와 명확한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B양을 피해자 신변 보호 대상으로 지정하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서 세 살배기 원아 학대 의혹...경찰 수사

전남지역 한 어린이집 교사가 3살 원아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A(51·여) 씨가 B(3)양을 학대해 다치게 했다는 신고를 받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낮 12시 39분께 자신이 근무 중인 지역 한 어린이집에서 B양의 머리를 밀거나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무릎과 팔을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내용을 분석한 뒤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다.

“학생 상대 신체폭력 제보 학원, 광주교육청 대처 미흡”

시교육청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

학생에 대한 신체폭력 제보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학원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일 “지역 모 학원 원장이 지난해 12월 중순께 ‘시험성적이 낮았다’는 이유로 지시봉으로 학생의 엉덩이를 때리는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저질렀다는 제보가 최근 접수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피해학생은 2017년부터 최근까지 학대를 당해왔는데, 해당 원장이 무서워 부모에게 말도 못한 채 혼자 감당했다고 한다. 다른 학생들도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체적 학대가 더욱 심해졌으며, 피해학생은 통증을 견딜 수 없어 결국 학원을 그만뒀다. 형사고소가 이뤄져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해 횟수와 기간·피해 인원 등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이는 아동복지법상 명백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학원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기관인 시교육청의 대응 방식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며 “보통 아동학대 민원을 접수했을 경우, 시급하게 CCTV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해당 학원 지도점검 때 CCTV를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피해학생 측에서 CCTV 자료 열람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시교육청은 ‘CCTV만 있고 영상 저장장치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냈다. 피해학생의 부모는 증거가 인멸된 것은 아닌지 속만 타들어가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와 치료에도 소

홀했다. 수사기관이 신고 접수 즉시 피해학생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결해준 것과 대조적으로 교육기관인 시교육청은 피해학생 보호와 치유를 위해 어떤 프로그램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시교육청은 교습시간 임의 연장 등 추가 위법 사실이 있다는 점도 확인하지 않았다. 대신 피해학생 부모에게 ‘별점 30점(경고나 시정명령) 수준이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신고 된 피해에 대해서 조치 시교육청은 이해할 수 없는 게으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폭력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행정이 없는 한 폭력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피해학생의 적극적인 구제와 치료, 해당 학원의 추가 지도점검과 행정처분, 교육청 책임자의 진솔한 사과와 성의 있는 면담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남지부

“교내 갑질, 현실적

근절책 마련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일 “학교 내 갑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현실적인 갑질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전남 모 초등학교 교사 5명이 1년여 동안의 자료를 근거로 교장에 대한 갑질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전남지부는 “수업 방해·갑질·인격 모독·폭언·성차별 발언·인사권 남용·모함·편가르기·비민주적 학교운영 등의 신고 내용 중 전남도교육청은 성차별적 발언 등 일부 사실만 인정하고 ‘주의’ 조치만을 내렸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선욱기자

문 열린 주차차량서 금품 훔친 2명 구속

광주에서 주택가 주차 차량을 노려 금품을 턴 남성들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잇따라 쇠고랑을 찼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주택 밀집 지역에 주차 중인 차량에서 삼습적으로 금품을 턴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38)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광주 도심 곳곳에 주차된 차량 30여 대에 침입, 22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후사경이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잠겨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려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잇따라 저질렀으며, 검거 당시 수배 이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최근 차탈이 피해 신고 내역을 분석, A씨가 도심 내 율림 밀집 지역에서 일몰 직후 저녁 시간대에만 범행하는 점을 파악했다.

특히 A씨가 일정 주기에 따라 지역을 옮겨 다니는 점을 확인, 범행 발생 예상 시간대·장소에서 잠복 수사를 벌였다. A씨는 문이 열린 차량을 탈려다 잠복 중인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앞서 서부경찰은 주택 밀집 지역에 세워진 차량에서 금품을 턴 혐의(절도)로 노숙자 B(25)씨도 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달 6일까지 광주 서구 율림 밀집 지역 내 주차 차량 3대에서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